

탄소무역규제에 따른 통상정책 연구

이소영*

*충북연구원

e-mail:sylee@cri.re.kr

A Study on Trade Policy in Response to Carbon Trade Regulations

Soyoung Lee*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요 약

본 연구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분석한 후 최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책 차원에서 한국 정부 및 충청북도 지자체의 산업현황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주요국의 지방정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장기적으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이 전세계적으로 환경보호의무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할 것이며, 특히 생산가치사슬상에서 충북의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해외기업이나 대기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를 강제하게 될 때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은 환경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1. 서론

탄소중립을 선언한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수준의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과 탄소배출권 거래제(Carbon Emission Trading)등의 다양한 탄소가격 시그널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 역외에서 생산된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2025년까지는 배출량에 대한 보고의무만을 부여받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구입과 제출에 대한 의무가 추가된다. 본 연구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분석한 후 최적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정책 차원에서 한국 정부 및 충청북도 지자체의 산업현황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주요국의 지방정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2. 충북 탄소 다배출 산업 분석

충북지역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019년 137.3% 크게 증가하며, 10,429.59천톤 CO₂eq를 기록하였고, 시멘트산업과 관련된 시멘트 생산과 석회생산이 전체의 각 79%, 7%를 차지하여, 전체 산업공정부문 가운데 시멘트 산업의 배출량이 90%에 육박하고 있다(그림 1). 2021년 기준 국내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6.8%가 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상당한 양이 충북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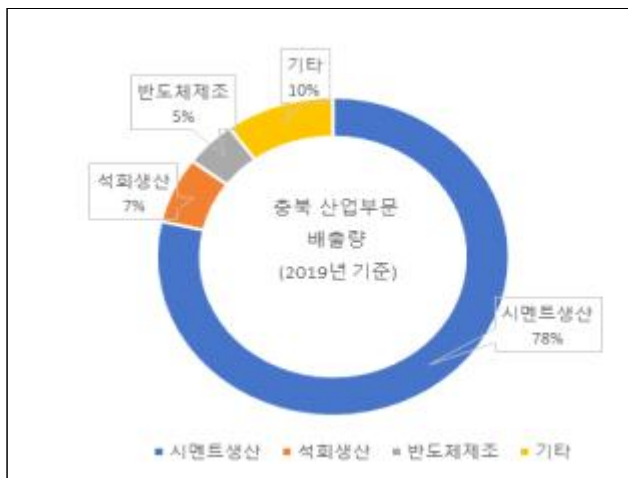
시멘트 산업에 이어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손꼽히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충북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공정가스 감축과 글로벌 기업의 ESG경영 선언 등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ESG 경영 강조와 기업의 탄소배출이 인류 생존의 위기와도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은 반도체 업계에서 꼭 해결을 해야 하는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시멘트업체와 반도체 업체가 충청북도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 도내 동향 및 여건 정보를 반영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3. 탄소국경조정제에 따른 영향 분석

첫 번째 시나리오는 탄소국경조정 및 여타의 환경정책이 존재하는 앓는 시장 자율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이후 기본 시나리오를 기초로 탄소국경조정 및 탄소세 부과 등의 환경 규제와 정책이 추가될 때마다 국가 경제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부분균형분석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시나리오의 비교를 통해 국가별 최적 대응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을 전제된 상황하에서는 역외국은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을 회피하는 전략이 가장 주요한 전략으로

파악된다. 이는 탄소세 부과가 탄소국경조정을 통해 관세를 부과를 회피함과 동시에 역외국 정부의 세수를 증대시켜 사회후생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편 분석결과 유럽이 지정한 탄소국경조정 대상 품목 및 향후 지정대상품목은 현재의 충청북도의 주요 수출 품들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단기측면에서 충청북도의 기업들은 직접적인 탄소국경조정세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의무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할 것이다. 대기업은 ESG 등으로 환경의무에 이행에 대한 인식이 높고 대응역력이 존재하는 편이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 특히 생산가치사슬 상에서 충북의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해외기업이나 대기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를 강제하게 될 때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은 환경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그림 1] 충청북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참고문헌

- [1] 오세진, “유럽의 탄소국경조정대응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
- [2] 박혜리, 박지현,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년